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 국회의원

이재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723호 (우 07233)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로144 태원프라자 204호
02-784-4410 031-8083-2989 jaeganglee@gmail.com

문의) 김재영 선임비서관 010-3090-3539

2024년 10월 08일(화)
즉시사용가능

이재강 의원, 통일교육원 통일교육 원내과정의 허술한 정책 실효성 지적 및 엄정한 운영 요구

- 정책연구과제보고서 표절률, 최고 42%에 이르러
- 교육 이후 유관 부서 배치 공무원도 사실상 전무

이재강 의원(경기도 의정부시을, 더불어민주당)이 국립통일교육원 ‘통일교육 원내과정’의 허술한 관리 실태를 지적하고, 교육 이수생들에 대한 엄정한 운영을 바탕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통일교육 원내과정은 중앙·지자체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차세대 통일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통일교육 원내과정의 세부 사업은 대상 및 기간 등에 따라 통일정책지도자 과정·통일미래기획 과정·차세대 통일 전문가 과정·통일정책최고위 과정·통일교육 전문강사 양성·해외 신진학자 초청교육·해외 전문가 통일교육원 초빙교수·공직자 평화통일 역량강화 과정·통일부 직원 교육과정·평화해설사 양성 과정 등이 포함된다.

먼저 이중 통일미래기획과정은 6개월간 진행되는 국내·외 연계교육 프로그램으로 매년 중앙부처 서기관 이하 및 공공기관 직원 30명씩 2기수를 운영하는 과정이다. 2023년 한 해 동안 4.17억이 집행되었다. 해당 과정의 교육생들은 교육 후 이수를 위해 정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이재강 의원은 통일교육원에 해당 교육과정의 최근 3년간 교육 결과 보고 제출을 요청하였고, 통일교육원은 아래와 같이 ‘2023년 통일미래기획과정 교육운영 평가 및 개선방향’이라는 결과 보고를 제출하였다. 해당 보고에 따르면 2023년 통일미래기획과정 교육 이수생의 정책보고서에 대한 평균 표절률은 3%에 지나지 않는다.

그림 2 통일교육원이 의원실로 제출한 「2023년 통일미래기획과정 교육운영 평가 및 개선방향」

○ 교육생들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활동 등은 정책보고서의 질적 향상으로 연결

- 표절검사(카피킬러) 결과 평균 표절율 3%(37기 2.7%/ 38기 3.3%) 등 보고서 질 제고
- 사전교육 등으로 인한 교육생들의 기본 역량 향상에 대한 해외연수기관(독일 베를린자유대)의 호평

그러나 이재강 의원실에서 교육 이수생들이 제출한 결과보고서 중 일부에 대한 표절검사(카피킬러)를 시행한 결과, 다른 연구자의 박사학위 논문 일부를 통으로 인용하고도 그 출처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은 논문들이 다수 확인되었다.

그림 3 정찬우(2021), 「통일세 도입에 관한 연구 : 단계별 접근 방법을 중심으로」

나아가 연방재정법원은 조세는 입법권자의 입법재량에 따라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될 수 있는 바, 연대부가세율이 입법상의 한계를 초과한다든지, 일몰기한을 반드시 제정하여야 한다든지, 부과에 시간적 제한을 두어야 한다든지, 개인과 법인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된다든지 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연방재정법원은 연대부가세법은 기본법상의 평등의 일반원칙과 형평성 원칙을 준수하고 있고, 신뢰보호의 이익(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재산권의 침해는 최소한으로 그치고 있는 점 반액과세원칙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들어 기본법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다.

그림 4 김00(2023)통일미래기획과정 38기, 「통일한국 재정수요 조달을 위한 특별조세 도입방 연구」

판결하였다.⁶¹⁾ 나아가 연방재정법원은 조세는 입법권자의 입법재량에 따라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될 수 있는 바, 연대세율이 입법상의 한계를 초과한다든지, 일몰기한을 반드시 제정하여야 한다든지, 부과에 시간적 제한을 두어야 한다든지, 개인과 법인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된다든지 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연대세법은 기본법상의 평등의 일반원칙과 형평성 원칙을 준수하고 있고, 신뢰보호의 이익(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재산권의 침해는 최소한으로 그치고 있는 점, 반액과세원칙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들어 기본법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러한 판시 이유를 보면, 1995년에 제시

애초 교육 이수생들의 평균 표절율이 3%에 지나지 않는다면 결과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인용/출처 표시문장 [제외], 법령/경전 포함문장 [제외], 목차/참고문헌 [제외] 등 모든 기준을 제외하는 등 매우 허술하게 설정한 상태로 검사한 결과치로, 의원실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상기 기준을 모두 [포함]으로 설정하여 표절 검사를 다시 해본 결과 기존 1%에 지나지 않는다면 표절률은 22%로 크게 치솟았다.

그림 5 국립통일교육원의 표절검사 기준 및 결과

아이디				표절률	1%
소속					
성명					
검사번호				검사일자	2023.11.29 11:50
발급형태	☐ 기본보기 ☐ 요약보기 ☒ 상세보기			발급일자	2023.11.29 11:52
검사명	통일미래기획과정 제38기				
문서명	통일미래기획과정 정책보				
비고					
비교범위	[현재첨부분서] [국립통일교육원 사용자 검사문서] [국립통일교육원 사용자 비교문서] [카피킬러 DB]				
검사설정	표절기준 [6 어절], 인용/출처 표시문장 [제외], 법령/경전 포함문장 [제외], 목차/참고문헌 [제외]				

그림 6 이재강의원실의 표절검사 기준 및 재검사 결과

이메일				표절률	22%
성명					
소속					
검사번호					
검사명					
문서명					
비교범위	[현재첨부분서] [내가 올린 문서(전체/16개 문서)] [동아대학교 사용자 검사문서] [동아대학교 사용자 비교문서] [카피킬러 DB]				
평가유형	☒ 카피킬러 ☐ GPT킬러			발급형태	☐ 기본보기 ☐ 요약보기 ☒ 상세보기
발급일자	2024.10.07 22:15			검사일자	2024.10.01 18:01
비고					
	평가 설정				
인용/출처 표시문장	검사 대상 포함	법령/경전 포함문장	검사 대상 포함	목차/참고문헌	검사 대상 포함

* 국립통일교육원과 국회의원 이재강의원실은 동일한 프로그램(카피킬러)을 활용했음. 그럼에도 상기 두 결과지의 양식이 상이한 것은 통일교육원과 이재강의원실에서 진행한 검사지원기관이 상이했기 때문. 이재강의원실은 대학원생에게 지원하는 모 대학의 표절 검사를 활용했음.

상황은 차세대통일전문가과정도 마찬가지였다. 차세대통일전문가과정은 2030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과 졸업생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등 50명을 대상으로 36주간 진행하는 교육과정이다. 2023년 한 해 동안 1.8억이 집행되었다. 본 과정 교육생도 이수를 위해 정책연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재강 의원실은 해당 과정 교육 이수자들이 제출한 정책보고서 일부도 표절 검사를 진행하였고, 확인 결과 해당 과정의 정책연구보고서 중 일부는 아래와 같이 아예 박사 논문 한 절을 통으로 베낀 사례도 있었다.

그림 7 박해신(2021), 한국교통대학교 교통대학원, 「남북철도 연결이 해외직구 수단선택에 따른 통행시간가치에 미치는 경향과 정책적 발전방안 연구」

보다 1인당 GDP가 높았다. 제1차 6개년 계획기간(1971~1976)에는 이천~세포간 북한의 동서를 가로지르는 주요간선을 건설함으로써 황해도와 강원도의 교류와 유통을 활성화시켰고 강계~해산~무산간 약 400km의 철도가 건설되어 동해와 서해의 경제연계를 강화하고 북부내륙지역의 경제발전에도 기여하였다. 또한 평양에 남한보다 1년 일찍 지하철(20km)를 개통했고 청진~나진, 평양~마동간 160km가 넘는 철도를 전철화하였고 남신의주~덕현, 은파~철광간의 420km가 넘는 새로운 철도를 부설했다. 1980년대에 들어 소련의 경제적 활력이 저조해지면서 북한과 소련간의 대외무역도 감소하기 시작하고 김일성의 뒤를 이은 김정일의 집권이 시작되면서 80년대 북한 경제 3대 흑역사라 불리는 대규모 정책이 실패하며 엄청난 경제적 자산을 잃었고 북한의 경제는 점점 쇠락하였다. 제2차 7개년 계획기간(1978~ 1984)에는 철도의 전철화를 계속 추진하여 평양~남포, 고원~봉산, 길주~해산간 1,500km의 철도를 전철화했고, 전기차와 화물차 등의 철도운수차량도 계속 증가하였다. 북한은 이렇게 경제 개발기간을 잘 활용하여 철도의 전철화 및 신선을 건설하여 경제발전과 지역개발을 이루어 냈다. 1990년대에는 주거래 국가들이었던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와 사회적으로 혼란한 시기가 찾아왔고 수출과 수입이 감소되기 하면서 공장들은 점점 멈추기 시작했고 외화수입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 결과 화석연료의 부족으로 인해 정전 발생이 잦아지고 열차가 지연되기 시작하며 북한은 점점 더 어려운 경제난을 겪기 시작했다. 또한, 1994년 김일성이 사망으로 국가가 마비되고, 1995년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등 일제강점기보다 더 힘든 시기를 겪게 되고, 2000년대에도 경제는 나아지지 않게 되었다. 2011년 김정일이 사망하고 김정일의 아들이자 김일성의 손자인 김정은이 집권하기 시작했다. 김정은은 시장경제 체제를 인정하고 제도화시키

그림 8 2023년 차세대 통일전문가 과정 정책연구보고서, 「북한 철도 현황과 남북한 철도 연결방안 연구」 中

그리하여 남한에 비해 북한의 경제속도는 상당히 빠르게 변해갔다. 그래서 1973년 까지는 1인당 GDP가 남한보다 높았다. 제1차 6개년 계획기간(1971~1976)에는 이천~세포 간 북한의 동서를 가로지르는 주요간선을 건설함으로써 황해도와 강원도의 교류와 유통을 활성화 시켰고 강계-혜산-무산 간 약 400km의 철도가 건설되어 동해와 서해의 경제연계를 강화하고 북부내륙 지역의 경제발전에도 기여하였다.

또한 평양이 남한보다 1년 일찍 지하철을 개통하였고 청진-나진, 평양-마동 간 160km가 넘는 철도를 전철화 하였고, 신의주-덕현, 은파-철광 간의 420km가 넘는 새로운 철도를 부설했다. 1980년대에 들어가면서 소련의 경제적 활력이 떨어지면서 북한과 소련 간에 대외무역도 둔화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김정일의 집권이 시작되면서 80년대 북한 경제 3대 대규모 정책이 실패하며 엄청난 경제적 자산을 잃었고 경제는 점점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이렇게 경제 개발기간을 잘 활용하여 철도의 전철화를 건설하여 경제발전과 지역개발을 이루어냈다. 1990년대에는 사회주의 국가들이 경제와 사회적으로 혼란한 시기가 찾아왔고 수출과 수입이 둔화되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공장들은 점점 멈추기 시작했고 외화벌이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러하다 보니 화석연료의 부족으로 정전발생이 잦아지고 열차가 지연되기 시작하며 북한은 점점 어려운 경제난을 겪기 시작했다.

설상가상으로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하자 국가가 마비되고 1995년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일제 강점기보다 더 힘든 시기를 겪게 되고 2000년대에 들어서도 경제는 나아지지 않게 되었다. 2011년 김정일이 사망하고 아들인 김정은이 집권하기 시작했다. 김정은은 시장 경제체제를 인정하고 제도화

이처럼 이재강 의원실에서 상기 기준으로 확인한 정책보고서의 최고 표절률은 42%에 달했다. 한편 국립 통일교육원의 통일교육 원내과정은 상술한 바와 같이 허술한 관리뿐만 아니라 국민의 혈세가 13.4억 원이나 집행되고 있음에도 정책 실효성을 제대로 담보하지 못하고 있었다.

* 통일부의 2024년 5월,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통일교육 원내과정에는 13.4억 원이 집행됨. 통일미래기획 과정(4.17억)·차세대 통일 전문가 과정(1.8억)·통일정책지도자 과정(3.19억)·통일정책최고위 과정(0.59억)·통일교육 전문강사 양성(1.26

역)·해외 신진학자 초청교육(0.71억)·해외 전문가 통일교육원 초빙교수(0.66억)·공직자 평화 통일 역량강화 과정(0.69억)·통일부 직원 교육과정(0.25억)·평화해설사 양성 과정(0.09억) 등.

일례로 통일정책지도자 과정은 남북 관계 진전과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범국가적 차원의 통일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매년 국가기관 및 지자체 3·4급 및 공공기관 간부 64명을 대상으로 총 45주간 진행되는 사업이다. 2023년 한 해 동안 통일정책지도자 과정에는 64명의 이수를 위해 약 3억 1천 2백 만 원이 소요되는 등 산술적으로 1인당 대략 487만 원의 국민 세금이 활용되었다.

그러나 이재강 의원실이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를 통해 최근 3년간 해당 과정과 통일미래기획과정을 수료한 교육 이수생들의 파견부처 복귀 직후의 보직 경로를 확인한 결과, 이들은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45주간 통일 관련 교육을 수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이수 직후 버스타시과장, 돌봄보육팀장, 체육대회 지원단장, 자원순환과정 등으로 인사발령 나는 등 사실상 통일과 관련한 부서에 배치받은 인원도 전무했다.

2022~2024년 통일교육원 교육훈련 참여자 명단 및 교육훈련 이수자에 대한 보직경로 현황

연도	교육과정명	지도	비고	교육장서 계급	교육기간(월)	교육 기관 조직	교육 직후 보직
2022년	통일정책지도자과정	서울특별시		지방부처서관	2022. 2. 7. ~ 12. 16.	서울특별시 기술인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사설박람회
2022년	통일정책지도자과정	인천광역시		지방서기관	2022. 2. 7. ~ 12. 16.	인천광역시 대동청년과 청소년정책팀장	인천광역시 경제정책과장
2022년	통일정책지도자과정	광주광역시		지방서기관	2022. 2. 7. ~ 12. 16.	광주광역시 혁신소통기획관	광주광역시 경제정책팀장
2022년	통일정책지도자과정	울산광역시		지방서기관	2022. 2. 7. ~ 12. 16.	울산광역시 법무정책팀장	울산광역시 버스혁신과장
2022년	통일정책지도자과정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서기관	2022. 2. 7. ~ 12. 16.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세종특별자치시 경제정책과장
2022년	통일정책지도자과정	경기도		지방서기관	2022. 2. 7. ~ 12. 16.	경기도 기획재정담당관	경기도 교통정책과장
2022년	통일정책지도자과정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서기관	2022. 2. 7. ~ 12. 16.	강원도 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	태백시 구서청
2022년	통일정책지도자과정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서기관	2022. 2. 7. ~ 12. 16.	강원도청청사교육진흥팀 사무국장	강원도 문화체육과장
2022년	통일정책지도자과정	충청북도		지방서기관	2022. 2. 7. ~ 12. 16.	충청북도 농림정책과 농정기획팀장	충청북도 인구정책담당관
2022년	통일정책지도자과정	충청남도		지방서기관	2022. 2. 7. ~ 12. 16.	충청남도 문화정책과 문화정책팀장	충청남도 인재개발원 토목교육운영과장
2022년	통일정책지도자과정	경상북도		지방서기관	2022. 2. 7. ~ 12. 16.	경상북도 무역개발지원과장	경상북도 관광정책과장
2022년	통일정책지도자과정	경상남도		지방서기관	2022. 2. 7. ~ 12. 16.	경상남도경제개발원 정책연구과장	경상남도 교통정책과장
2022년	통일미래기획과정(상반기)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지방행정사무관	2022. 2. 19. ~ 8. 18.	임실군 경제문화과장	임실군 행정지원과장
2022년	통일미래기획과정(상반기)	경상북도		지방행정사무관	2022. 2. 19. ~ 8. 18.	경상북도 법무혁신담당관 행정심판팀장	경상북도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장
2022년	통일미래기획과정(하반기)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지방행정사무관	2022. 8. 3. ~ 12. 2.	임실군 농축산물유통팀장	임실군 축산과장
2022년	통일미래기획과정(하반기)	경상북도		지방행정사무관	2022. 8. 3. ~ 12. 2.	경상북도 청년정책팀장 청년일자리팀장	경상북도 대안농업지원팀장 동물보육팀장
2023년	통일정책지도자과정	서울특별시		지방부처서관	2023. 1. 26. ~ 12. 1.	서울특별시 직통회수시물주변안전장	서울특별시 복지기획관
2023년	통일정책지도자과정	부산광역시		지방기술서기관	2023. 1. 26. ~ 12. 1.	부산광역시 건축시설팀장	부산광역시 부산항구 도시관리국장
2023년	통일정책지도자과정	인천광역시		지방서기관	2023. 1. 26. ~ 12. 1.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스타트시티과장	인천광역시 교통정책팀장 도시교통정책팀장
2023년	통일정책지도자과정	광주광역시		지방서기관	2023. 1. 26. ~ 12. 1.	광주광역시 인적정보과장	광주광역시 여성가족과장
2023년	통일정책지도자과정	대전광역시		지방서기관	2023. 1. 26. ~ 12. 1.	대전광역시 육류산업과장	대전광역시 자연유산과장
2023년	통일정책지도자과정	울산광역시		지방서기관	2023. 1. 26. ~ 12. 1.	울산광역시 식약안전과장	울산광역시 체육회지원단장
2023년	통일정책지도자과정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기술서기관	2023. 1. 26. ~ 12. 1.	세종특별자치시 자원순환과장	세종특별자치시 자원순환과장
2023년	통일정책지도자과정	경기도		지방서기관	2023. 1. 26. ~ 12. 1.	경기도 예산정책과장	경기도 산업정책과장
2023년	통일정책지도자과정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서기관	2023. 1. 26. ~ 12. 1.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과장	황해도 부군수

2023년	통일정책지도자과정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서기관	2023. 1. 26. ~ 12. 1.	전북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장	전북특별자치도 금융사회정책과장	
2023년	통일정책지도자과정	전라남도	지방서기관	2023. 1. 26. ~ 12. 1.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장	전라남도 농업정책과장	
2023년	통일정책지도자과정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서기관	2023. 1. 26. ~ 12. 1.	제주특별자치도 인명정책과장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과장	
2023년	통일미래기획과정(상반기)	충청북도	안양군	2023. 2. 13. ~ 8. 11.	안양군 지역정책과장	안양군 주민복지과장	
2023년	통일미래기획과정(상반기)	경상남도	합동시	지방행정사무관	2023. 2. 13. ~ 8. 11.	합동시 안전행정	합동시 합동행정
2023년	통일미래기획과정(하반기)	충청북도	안양군	지방행정사무관	2023. 8. 2. ~ 12. 1.	안양군 민생지원	안양군 체육진흥
2023년	통일미래기획과정(하반기)	경상남도	합동시	지방행정사무관	2023. 8. 2. ~ 12. 1.	합동시 구상행정	합동시 민생행정

즉, 현재 국립통일교육원의 통일교육 원내과정은 교육과정 전체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고 정책의 실효성 확인이 어려우며, 해당 교육을 이수한 이들 또한 복귀 후 이수 과정에서 습득한 지식을 활용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지속하고 있어 사실상 국민 혈세를 활용한 공무원들의 '국내 연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이재강 의원은 “지난 광복절, 尹 대통령은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고 7대 통일 추진방안(Action Plan) 1번으로 통일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언급했다.¹⁾ 尹 정부는 우리 국민이 자유 가치를 공고히 하고 이에 대한 책임 의식으로 무장해야 한반도의 자유 통일을 주도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는 1인당 국민 혈세를 최대 500만 원씩 들여 진행하는 교육과정을 이처럼 무책임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 국민 중 어느 누가 대통령 철학에 동의하겠느냐.”라며 “무엇보다 통일교육원이 자체적으로 통일교육 원내과정 전체에 대한 더욱 엄정한 운영이 필요하다. 향후 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을 요구할 것”, “이후로는 교육 이수생이 소속 기관으로 복귀한 후에 원내 과정에서 습득한 지식을 잘 활용하여 정책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통일부가 인사혁신처 또는 행정안전부와 상호 협의하는 방식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 이라고 말했다.

끝.

1) 7대 통일 추진방안(Action Plan) : ①통일 프로그램 활성화 ②북한인권 개선 다차원적 노력 전개 ③북한주민 생존권 보장 위한 인도지원 추진 ④북한주민 정보접근권 확대 ⑤북한이탈주민 역할 통일역량에 반영 ⑥ 남북 당국간 대화협의체 설치 제안 ⑦국제한반도포럼 창설